

성과급, 교원평가, 전교조 법외노조, 대입제도 개선 약속 파기 ...

교육 적폐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1년,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 — 전교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가 중동에서
강패짓 하는 이유

9면

노동자 운동의
이슈들

2, 3, 4, 5면

한국 교사들의
현실,
미국 교사 파업

6~7, 8~9, 12면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8~9면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10면

마르크스 탄생 200년
일찍부터
여성 차별 현실과
해방 잠재력에
주목하다

11면

온라인 기사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올까?

〈한겨레〉 기자
마약 투약 사건으로 본
자본주의와 마약

나쁜 노동조건 반대, 9일째 파업중인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안형우

오늘(5월 24일)로 9일차에 접어든 한국오라클 파업이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알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노동자들은 애초 사흘로 예정했던 파업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며 투지를 드러내고 있다.

23일 열린 집중 집회에서는 노조가 준비한 조끼 400벌이 모두 소진됐다. 긴 휴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았다.

오라클은 대표적 글로벌 IT 기업으로, <포브스>가 뽑은 소프트웨어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다. 매출은 40조 원에 달하고, 한국오라클의 매출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10년째 제자리인 임금

“오라클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의 설렘과 떨림을 잊지 못한다”는 한 노동자의 말처럼 오라클은 IT 노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기대와 사뭇 달랐다. 10년간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최근 사측은 고객사가 크게 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영업직 노동자들을 늘렸다. 그러면서 개별 노동자들의 영업 목표치는 높게 유지시켰다. 많은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임금을 삭감당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성과급을 단 1퍼센트밖에 받지 못한 노동자도 있었다. 성과급 비중이 50퍼센트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이 반토막난 것이다.

무급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고발은 충격적이다. 한 기술직 노동자(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프로젝트에 할당돼서 파견을 가면 95시간에서 110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사측은 모자란 인력을 제때 채워 주지 않았다. “엔지니어가 한 명 퇴사하면 다음 엔지니어가 입사할 때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씩 걸린다.”

‘고급 고객 서비스’ 부서 엔지니어가 하루를 일하면 사측은 고객사로부터 100만 원 이상 받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장시간 일하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정해진 시간 이상 초과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심지어 영업직이나 영업팀 소속 엔지니어들은 야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다.

높아지는 결속력

파업은 노동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칸막이 돼 일하며 서로 쪼개져 지내던 노동자들은 단결해 싸우면서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한 영업직 노동자는 “사실 현장 엔지니어 근무조건이 저 정도로 열악할 줄

“오라클 파업 전까지만 해도 파업이라는 건 굉장히 멀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도 파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한다.”

은 몰랐다”고 했다. 한 기술직 노동자는 영업직이 사측의 일방적 성과 목표 조정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털어 냈다.

다른 노동자의 이야기는 시사적이다. “[동료들과 함께 투쟁하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좁은 시선으로 살았는지 알게 됐다. 외국계 기업이니 개인주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파업으로 여러 부서들과 함께 섞여 서로의 애환을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됐다. [그동안의 모습은] 개인주의[였다기] 보다는 살기 위해 발버둥친 것이었다.”

애초 사흘로 예정한 파업이 무기한으로 변경되면서 노동자들의 결의도 높아지고 있다.

파업 참가율은 여전히 높다. 무급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엔지니어들은 90퍼센트 이상 파업에 참가해 “뽕뽕 뭉쳐 있다”고 한다.

“3일 동안 집회 참석했는데 내가 아는 팀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신입이지만 우리 팀 전체가 파업해서 같이 나왔다”, “출장을 취소하고 파업에 참가중이다”, “모든 팀원들이 계약을 멈추고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다.

노조 가입도 늘고 있다. 공중파 등 여러 언론에는 꿈의 직장인 줄 알았던 외국계 IT 기업의 노동 조건이 “악몽”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선 결과다.

파업 효과와 IT 노동자들의 힘

한 노동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오라클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농협 같은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전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부문 점유율이 60퍼센트에 이른다.

이런 곳의 상주 엔지니어들이 철수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사회 인프라가 마비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라클 자신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수익 창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설치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멈추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뽕뽕 뭉쳐 파업을 지속한다면 사측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열의가 높은 만큼,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훌륭한 의견들도 내놓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느끼면서 서로간의 연대 의식도 높아졌다. 5월 23일 한국오라클 앞 집회

“매일 파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사측을 더욱 압박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고 사측의 분열 시도에도 대응하기 좋을 것이다.

다른 IT 노동자들에게 주는 영감

어떤 노동자는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곳에 가서 파업을 알리자”고 했다. 이는 다른 IT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도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결성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노동조합의 광창용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라클 파업 전까지만 해도 파업이라는 건 굉장히 멀어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도 파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한다.”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은 다른 IT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파업이 승리한다면 다른 IT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나설 수 있다. 최근 16일간의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둔 탸디 노동자들이 다른 수제화 제조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있듯이 말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힘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처음 투쟁에 나선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승리하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

7월 19일(목) ~ 22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해외 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 대학노조 활동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트랜스여성

로라 마일스가 연설하는 워크숍

- 개막 집회 연설 노동현장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기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트랜스젠더와 마르크스주의

웹사이트(marxism.or.kr)에서 더 많은 발제자를 확인하세요.

교육

- 패별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투쟁
- 교사노동자 운동의 평가와 전망
—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 신자유주의가 교육과 교육 노동자에게 끼친 해악과 그에 맞선 투쟁
- 러시아혁명과 교육

심리학

- 에리히 프롬의 심리학
- 한국인의 심리
-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그 밖에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마르크스 탄생 200년,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 중국, 한국 현대사와 민중 저항사, 종교 등을 주제로 70여 개의 워크숍이 열립니다. 웹사이트(marxism.or.kr)에서 더 많은 주제를 확인하세요.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참가비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탄력근로 확대 —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박설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코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권당은 지난 2월 보수 야당과 손잡고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중복합종을 폐지하고, 특례업종을 유지(21개에서 5개 축소)하는 내용이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데 비하면, 그 내용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개정법의 제한적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마저 더 반감시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의 조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위험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노동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이 곳들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 사용자 편의를 봐 주고, 전체 노동시장에 변형근로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과 추가 인력 확보, 임금 보전 등에 관한 지원 방안이 명목상 포함되기는 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을 강제할 어떤 조처도 없이, 그저 정부 지원금을 짚끔 주고 직업 훈련을 보장한다는 것 정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1일 노동시간 연장 꿈수

문제의 핵심인 탄력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2주 혹은 3개월 단위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적 상한선에 맞추되 그 내에서 주당 노동시간,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령 3개월 단위의 경우, 1.5개월은 일주일에 최대 80시간(주 52시간제의 경우 64시간), 1일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머지 1.5개월은 평균치보다 적게 근무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총량이 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정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 특정 기간 지속되는 연장근무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높이고, 산업 재해를 늘릴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과 생활을 모두 힘들게 하려 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노동시간 선택권을 늘린다고 홍보하지만, 영국·독일·미국 등의 경험을 보면 그 선택권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2015년 <파이낸셜타임스>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확대한 미국 월마트에서 '노동자들이 근무가 압박해서야 자신의 근무 스케줄을 통보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기가 어렵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는 중국의 월마트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더해 유연근무제까지 도입된 데 반발해 전국 400여 개 매장에서 파업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탄력근로시간제의 일차적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선버스다. 시내·시외·고속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씩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고 대형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혹독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근래 서울·인천 등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곳에서는 1일 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 등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문제가 여전하다.

이 노동자들은 이제서야 간신히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노동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업종의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췄다. 이에 더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이해한 다며,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총 노동시간은 줄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은 추가 수당 없이 일주일에 무려 80시간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 내야 한다. "과로버스"를 없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분야에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12조8교대라는 '미친 교대제'까지 등장했다. 이 경우에도 노동시간 총량은 줄어들지만, 일주일에 이틀을 꼬박 12시간씩 일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도 들쭉날쭉 해진다. 한 개 조당 줄어드는 인력 때문에 노동강도도 강화될 수 있다.

이 같은 교대제 개악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자 측은 좀더 복잡한 교대제

체계를 만들고 연속 근무 사이에 생기는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 시간으로 돌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 휴게시간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벗어난 또 다른 대표적인 업종은 사회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럴듯해 보이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육 교사들은 그동안 원래 제공돼야 마땅했을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사용자들은 점심시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둔갑시켜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돌본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 교사들의 진짜 휴게시간 보장 요구를 수용하는 듯 말했지만, 노조는 그 내용이 "영터리 계획"이라고 지적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은커녕,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고 보육환경 저해와 공백까지 우려되는 대책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운용의 책임을 '이용자'나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간제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충원해야 할 판에,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메우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더기로 만들자, 민간부문 노동현장 곳곳에서도 온갖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삭감

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일은 다반사다. 신세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라는 미명하에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도 줄이라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나 현대차는 사무직의 업무용 컴퓨터에 '근무와 시간'들을 체크하도록 강제하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늘리는 데서는 매우 불충분한 반면, 기업의 수익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위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즉, 사용자가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더 유연한 작업 패턴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노동자들을 쉴 틈도 없이 쥐어짜며 감시·통제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로 내세웠던 '일·생활의 균형'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족·대인 관계를 해치는 데 이바지할 뿐이다.

변형근로로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심야근무까지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쉬는 날에도 가족을 돌보거나 여가생활을 누리기 어렵다. 출퇴근 시간까지 들쭉날쭉해지면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임금이 깎여 생계의 불안정성도 커진다. 현장 통제와 노동강도 강화로 작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변형근로 확대 방안 폐기, 인력의 대폭 확충, 임금 보전과 노동강도 강화 반대 등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사용자를 위한 탄력근로 도입은 인력 충원(인건비 증가)을 회피할 의도로 도입되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박설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산 계획조차 이행이 불확실하다.

일자리를 지켜 주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군산 공장 폐쇄를 용인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했다. 급속노조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GM에 맞선 정부와 노동조합의 ‘패자 동맹’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주장을 했다. 이제 정부(산업은행)도 한국GM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려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키우는 “건전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한국GM을 실사해보니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문제였다’(산업은행장 이동걸)고 하는 정부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공상이다.

무엇보다, 한지원 연구원의 견해는 기업의 산업전망(수익성 높이기)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는 데서 비롯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특히 경제 불황기에) 시장 경쟁력을 쫓는 것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가 ‘건전한 경영자’가 되길 기대하지 말고, 노동자들 자신이 단호하게 싸워 일자리 보장을 강제해 내야 한다.

한국GM의 위기와 구조조정은 결코

자본주의에서(특히 경제 불황기에) 시장 경쟁력을 쫓는 것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끝난 게 아니다. 특히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방안, 부평 2공장의 1교대 전환 시도에 따른 인력 축소 등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측은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이 노동자들을 3년간 유급휴직으로 돌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중 2년 6개월치 임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자면서 말이다. 이미 임금이 대폭 깎인 노동자들더러 또다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소리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지엠지부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며 또다시 불필요한 타협을 했다. 다행히 다수 대의원들이 정당한 반발로 폐기시켰다.

또, 사측은 부평 2공장의 물량 감소를 이유로 추가 해고를 위협하고 나섰다. 현재의 주야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400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한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타 공장으로 전환배치 돼야 한다. ‘희망퇴직’으로 부평 1공장에 생긴 200~300개 자리를 두고 군산공장과 부평 2공장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반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투쟁에 연대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GM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유병규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을 반대하고,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당장 한국GM은 가동률이 30퍼센트 수준인 부평 2공장을 주간조만 운영하는 1교대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현재 부평 2공장에는 정규직 1500여 명과 비정규직 4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1교대제 전환만으로 절반의 인원이 줄어들 상황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평 엔진공장과 군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과정에서 ‘인소싱’(외주화 철회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말했다.

“경영 정상화를 얘기하려 한다면, 적어도 군산공장 폐쇄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측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물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불법파견에도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이윤 논리에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반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건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스공사 비정규직은 1200여 명입니다. 그중 900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7개 직종입니다. 시설, 특수경찰, 미화, 소방, 홍보, 파견(설계 인력), 전산 직종이 있죠. 모두 가스공사에 없어

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전산 직종인 저는 해킹 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조 2교대로 일하는데 야간일 때는 15시간을 내리 일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해요. 사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인력 충원도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옛날에 모두 정규직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 아웃소싱 바람이 불면서 비정규직이 됐죠. 우리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사측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전산 직종 노동자들은 하

는 일이 다양합니다. 인터넷 회선망 관리, 프로그램 작성, 서버 운영 등을 하고 있어요. 사측은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라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거든요. 다른 공기업에서도 전산 직종이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홍보전을 하며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5월 안에 전산 직종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산 직종 안에서 대상을 나눠 일부를 제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나마 논의가 된 건 우리가 투쟁한 성과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산 직종이 직접 고용됐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비록 자회사 고용이지만 전산 직종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니다. 가스공사도 전산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외치기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이나 정책이 없어요. 무조건 지자체나 공기업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감시 기구라도 뒤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망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탄압으로 깨졌죠.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은 노조 활동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지부장인 저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터 업무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곧 쟁의권도 확보할 겁니다. 우리가 일손을 놓으면 가스공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김지태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장우성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고용노동소위를 직접 방문해 강행 처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날 소위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일 새벽에 마무리됐지만, 24일에 회의를 재개한다. 이날은 표결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통속

홍영표는 산입범위 확대를 압박하면서, “전체 노동자가 1900만 명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만”이라며 제도 개악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3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기 상여금과 급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개악에 나서자 노동자들은 ‘더불어자한당’이라고 야유했다

식·통근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분의 50퍼센트 이상 삭감 효과가 난다. 정기 상여금만 포함시켜도 삭감율이 10퍼센트가 넘는다.

산입범위 확대의 목적은 (홍영표가 밝혀 왔던 바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줄이기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상여금·수당 등을 다시 빼앗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폭 확대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경총이 21일에 국회 처리에 반대한 것은 개악 폭이 성에 차지 않아서일 뿐이다. 23일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개악하라는 입장에 합의했다.

진보정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기업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한통속이다. 문

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압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중소기업·상공인의 표를 얻기 위해 반드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처리하려 한다. 어차피 기존 지지층은 달리 갈 데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저항

그러나 노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개악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5월 21일 국회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 마트, 청소 노동자들은 국회를 규탄하며 새벽 1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 갔고, 국회 진입도 시도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연행을 무릅쓰고 기습시위를 벌였고, 여성 노동자들도 경찰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왜 우리만 양보하라고 그러냐!”며 분노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개악하려는 것을 두고 ‘더불어자한당’이라며 야유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실

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8년차 급식 조리원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총액임금 올리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다 포함시키면 이게 무슨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이렇게 품수를 부리다니 문재인 정권에 실망이 너무 큼니다.”

민주노총은 5월 22일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참여를 재논의’하겠다고 해 온 만큼, 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보면 21일 밤에 민주노총이 경총과 함께 국회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고 한 것은 대안이 못 된다. 경제 상황과 기업주들의 이해를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로 가도 사회적 대화라는 형식만 다를 뿐 노동계에 가해지는 압박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대화 중단 ‘선언’에 머물지 말고, 그것의 진정한 의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것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와 대폭 인상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건설하는 일이다. 기업주들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서게 만들어야 한다.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정원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떼어 내 생명안전 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지금도 상당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5월 초에 “비정규직을 최대한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놓은 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공기업의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고용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려면 자회사와 외주화를 없애 비정규직이 계속 생겨나는 입구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자회사 확

대 정책은 그 입구를 온존시키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맹점이다.

더구나 외주화와 자회사 설립은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려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철도 역무, 콜센터와 차량 정비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직접 고용, 외주 업무 환원을 요구한다.

KTX승무지부도 5월 24일부터 서부역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태도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역무원들은 승객의 온갖 문의부터 스크린도어 고장,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등에 다 대처해야 한다. 하루에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일선에서 승객을 응대하는 역무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와 무관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철도공사가 차량 정비 중 누구는 직접 고용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현장 업무는 사측이 제시한 기준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동안 이 업무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외주화되거나 자회사에 위탁된 것이 아니다. 철도공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늘려 왔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초기 때 4만 명이던 철도 노동자가 지금은 정규직이 2만 6000명으로 줄었다(비정규직은 9000여 명). 철도 노선과 열차 운행이 대폭 늘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철도 안전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조건 방어 투쟁을 결합해야

철도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철도공사에게 철도 본연 업무를 하는 5000여 명을 직접 고용(정규직 6급)하라고 올바르게 요구해 왔다. 정부가 제시하는 전환 방식이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고용인 것과 달리 말이다.

사측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강경하게 거부하자 철도노조는 적어도 3500명은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KTX승

무 업무(코레일관광개발)와 역무 업무(코레일네트웍스) 등은 포함하고 있지만, 콜센터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일부 부분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아쉽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노조가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 설사 이번에 요구를 전부 성취하지 못해도 투쟁을 지속해 가는 데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규모와 조건 개선 모두에서 온전한 정규직화가 되도록 말이다.

철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외주화된 업무를 최대한 철도공사 업무로 환원하고 외주화 확대 압박을 줄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한다.

그래서 철도노조 중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이 임금과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규직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노조가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임금과 승진 차별)을 내놓으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건 악화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노조 집행부가 불가피하지 않은 후퇴와 타협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복지 삭감 등)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만회하려는 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지해야 한다. 투쟁 속에서 조건 개선의 자신감을 가질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의 지지도 더 확대될 수 있다.

정규직의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투쟁을 결합해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막 나게 생겼다. 매년 평균 교원 1만여 명이 퇴직하므로, 10년간 전체 교사 정원은 수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악의 교원 수급 대책”(전교조 논평)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인 양 포장했다.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겠다.]”

그러나 이는 학령인구 ‘자연 감소’로 인한 결과다. 2015년 평균을 7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달성하겠다는 것도 자랑은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진정 향상시키려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교사 1인당(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우리 나라의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퍼센트다. OECD 평균 4.5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늘리려 한다. 임기 내에 GDP 대비 2.4퍼센트(약 43조 원)를 2.9퍼센트 수준(약 60조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 17조 원을 교육에 투자하면 교사 수십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

교원 구조조정

신규 임용 감소는 예비교사들만의



임용문 좁히고 기간제 교사는 해고하고 교사 선발 인원 축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 제시”(교육부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절망”)이다.

문제가 아니다. 교사 1인당(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을 통한 교사 노동 조건 개선이나 교육 여건 개선도 미뤄진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정규 교사 신규 임용을 줄였다.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 대폭 임용으로 메웠다. 그 결과 10년 사이 고등학교 정규 교원 수는 절끔 증가했지만, 중학교 정규 교원 수는 실제로 줄었다. 반면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같은 기간 3배로 늘었다(2005~2013년 교원 수급 통계). 현재 기간제 교사는 4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정부가 장기적인 교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주로 채용해 온 탓이다.

정부가 정규 교사 임용을 억제하면서 법정 정원 확보율도 감소해 왔다. 김대중 정부 때 84퍼센트, 노무현 정부

때 82퍼센트, 이명박 정부 때 78퍼센트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학급 수와 교사 정원을 줄였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꿨다. 학생 수 감소를 교사 정원 축소와 연동시키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신규 임용을 과감하게 줄이지는 못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4000여 명의 임용 적체(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상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임용 대란’은 이 시한폭탄이 터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박근혜 정부조차 반발을 의식해 밀어붙이지 못했던 실질적인 교원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 해고

정부는 지난해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이유로 댔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예비교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양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초등 교사들의 신규 임용 교사 수를 30퍼센트나 줄여 ‘임용 절벽’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부였다.

교육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현실이 됐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정규 교원 확충”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간제 교사든, 정규 교사든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

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지 않았다. 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교원 확충을 요구하며 함께 투쟁했다면, 정부가 교원 감축 계획을 내놓고 추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칼끝이 결국에는 정규직을 겨누기 마련이다. GM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험은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 교사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원 구조조정(정원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그만큼 정규직 임용 교사 수를 늘리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도 장기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김 아무 전교조 조합원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후보가 재출마를 선언했다.(김석준 후보는 진보 후보로 불리기를 꺼린다고 한다.)

인천은 부패 문제로 이청연 교육감이 구속돼 도성훈 후보가, 전남은 장만채 교육감이 전남도지사로 출마해 장석웅 후보가 새롭게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그동안 보수 교육감 지역이었던 3곳에서 노옥희(울산), 성광진(대전), 이찬교(경북) 후보가 진보 교육감



5월 10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보로 도전장을 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도다. 올해 경기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꾸려진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소속 단체 대부분은 현 경기교육감 이재정에 대해 진보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송주명 후보가 경기도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출마한다.

경기도는 김상곤에 이어 이재정까지 10년 가까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공약을 공(空)약으로 만들고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해 실망감이 커진 상태다. 반면,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는 송주명 후보는 진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도입, 학

신학교 시행, 학생인권 신장,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줬다.

특히, 진보 교육감 등장 이후 열린 기회를 이용해 매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 무기계약직화, 근속수당 신설 등 노동조건 개선을 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혁신학교 실험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를 공약했지만, 보수적 반발에 눈치 보다 후퇴했다.

무엇보다, 적잖은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제주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투쟁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공격할 때도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다 할 구실을 하지 않아 교육 개혁

을 바라는 사람들의 실망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1기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은 지지부진하고, 경쟁주의 교육 정책은 온존하고 있다.

5월 10일 3기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전교조 인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감이 교육부에 요구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는 공동 공약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을 비판하며 대중의 진보적 교육 개혁 염원을 선거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당선하기를 바란다.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박혜성 전교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차별과 고용 불안이 남아 있는 자회사 고용 방식이 많아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그중 하나이다.

기간제 교사 4만 70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교육공무원법이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법령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문제다.

사실 정부가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휴직 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 대체 업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의 휴직 수요는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측 가능하다. 결국 예측 가능한 휴직 수요만큼 정교사를 더 고용하면 되는데, 정부는 이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5월 12일 '기간제 교사 해고 반대 정규직화! 학교비정규직 철폐! 투쟁 마당'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기간제 교사는 대폭 늘어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정교사의 10배에 이르렀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예비교사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난해 교육부는 교사가 청년 선호

일자리라든가 점을 들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정부는 교사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있다. 정부는 정교사 채용을 억제하는 교원 수급 정책을 쓰고 있다. 4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

고 있으니 신규 교사 선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결국 교사 신규 채용을 줄인 것은 바로 정부이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예비교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교사 채용 수 억제 정책은 기간제 교사 해고를 뜻하기도 한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결국 교원 감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이후 해고 사태를 맞았다.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이 해고됐고,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도 신규 채용을 고집하는 곳이 늘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학교를 떠나야 했다.

결국 정부의 정교사 수 억제 정책이 신규 교사 채용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한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인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고용 불안 때문에 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은 관리자들이 통제하기 쉽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거부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는 정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도 이용된다.

따라서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것이 교육의 질 개선, 교사 노동조건 개선 등에서도 이롭다.

기간제 교사들도 차별 철폐와 고용 안정,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정규직화 투쟁을 굳건히 계속할 것이다.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비민주적 통제에 복종하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을 탄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교사들의 72퍼센트가 현행 승진제 교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74.6퍼센트는 “근무평정을 주는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권위적인 학교 문화가 지속된다”고 답했다(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조사).

그래서 교장에게 학교 통제 권한을 주는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광범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교직원·학부모 등이 교장을 선출하고, 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모 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교사 참여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부가 새롭게 만든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위원 구성에서 학부모 비율이 40~50퍼센트인 반면, 교사 비율은 30~40퍼센트다.

또, 선출된 교장이더라도 임기를 마치면 교장자격증이 발급돼, 기존 승진 시스템으로 다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염원에 더 부응한다. 따라서 입법청원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학교 안팎으로 지지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다만,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자격은 학생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교장선출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의한 소환 제도도 마련해 두면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회의(교사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등의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 기구)를 의결기구화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찍어야 하나, 조희연 후보

김지윤

6·13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조희연 교육감(사진)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 등 단체 66곳이 모여 결성한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경선에서 당선됐다.

조희연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급급 폐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보수 단일 후보’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전교조 30년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폐지 시도를 비난하면서 혁신학교를 축소하고, ‘0교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경쟁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지난 대선 안철수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영달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추천 선발제, 혁신학교 추가 지정 중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

공약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는 민주노총의 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한 진보진영

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당선하는 것이 장차 교사, 비정규직 교·강사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좀 전까지도 자신의 4년 전 공약 이행에 매우 불철저하거나 지키지 않았다.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일, 전교조 전임자 인정이 뒤늦었던 것, 학

교 비정규직을 해고한 일 등.

또한 주요 쟁점에서 종종 권한 부족과 행정적 한계 등을 탓하며 후퇴하거나 개혁 속도를 늦추며 우파들의 눈치를 보다 그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곤 했다.

그래서 진보적 대중의 실망을 많이 샀다.

그럼에도 보수 교육감이 당선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당수 노동자들이 그를 진보 후보로 다시 뽑은 듯하다. 5월 11일 촛불교육감 추진위 해산식에서 여러 대표자들은 조희연 후보에게 이번에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그가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를 자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것은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자동으로 개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그래서 중요하다.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부문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평균 17퍼센트 낮은데, 1994년의 1.8퍼센트보다 격차가 훨씬 커진 것이다. 미국 노동자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임금이 사실상 삭감됐던 (40년 동안 임금이 고작 10퍼센트 올랐다) 것을 감안하면, 교사들의 실질임금 삭감 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투잡'을 뛰어 모자란 생계비를 벌충하고 있다.

교직의 76퍼센트를 차지하는 여성 교사들이 특히 커다란 공격을 받았다. 1960년에 여성 교사는 학력이 비슷한 다른 부문 여성 노동자들보다 임금 수준이 14.7퍼센트 높았지만, 2000년이 되면 오히려 역전돼 여성 교사들은 다른 부문 여성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13.2퍼센트 낮다.

구조조정도 심각한 문제다. 빈번한 해고로 정규 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애리조나주는 현직 공립학교 교사의 약 10퍼센트를 정규 교원이 아니라 (교원 자격증이 없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충당하고 있으며, 정규 교원과 비정규 교원 모두 학생 시험 성적에 기반한 평가 제도 때문에 상



'분노' 또는 '멈춤' 경고를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는 애리조나주 교사 노동자들과 지지자들

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육 환경도 열악해져, 교사들은 개인 돈 연평균 687달러(약 75만원)를 종이·필기구 등 교구 구입에 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주정부는 학교 도서관 사서, 상담사, 직원 등 비(非) 교사 학교 노동자를 대거 구조조정했고, 그 때문에 교

사들의 노동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해졌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당연히 더 나빠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사들이 임금 대폭 인상과 교육예산 삭감 반대를 결고 파업에 나섰다.

고무적이게도, 교사들은 비 교사 학교 노동자들과 단결해 파업에 나섰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교사 2만 명과

학교 노동자 1만 3000명은, 주정부의 갖가지 이간질 시도에도 끝까지 파업 대열을 함께 지켰다. 이런 단결이 승리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5월 중순에 파업에 승리한 애리조나주에서도 교사들은 상담사, 사서, 스쿨버스 운전사, 심리치료사, 사무 노동자 등과 함께 애리조나교육연합(AEU)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어 함께 싸웠다. 주 전체 1500여

공립학교 중 절반 이상인 800여 곳에서 파업에 동참했는데, 학교별·부문별로 보낸 연대체 파견자만 도합 2000명에 이르렀다.

현장 노동자 연대

이 같은 노동자 연대가 파업 확산과 승리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미국 교사들의 노동조합 운동은 역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사진)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가 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을 알게 됐는데 정말 따뜻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한 민족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죠. 가진 돈은 다 썼지, 북한에 돌아가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 '발전된 한국에 가서 먼저 배워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탈북 과정과 그 이후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중국 단속에 잡혀서 북한으로 가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온 가족이



다들온 기자

역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럴 경우에 자살하려고.

[남한에 오기 전에 거쳐 온] 태국 난민 감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좁은 감방 안에 300명이 있었어요. 매일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3개월 넘게 있었죠.

한국 와서는 울 새도 없었어요. 정부가 준 300만 원은 다 브로커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에 새

시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몸뚱이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내라는 건지... 그냥 때 가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지인이 보다 못해 돈을 빌려 줘서 냈어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한 거죠. 탈북민들이 사기도 많이 당해요. 나도 한 번 당해서 그 빚을 아직도 갚고 있어요.

내 삶이 힘들 때, 보호 담당 형사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디 갔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전화에 대고 욕을 했어요. 감시하려면 알아서 하든가, 물어보지 말라고. 보호 담당이라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해 준 적 있냐고. 나는 지금도 '조사하려면 알아서, 몰래 해라. 가뜰이나 살기 힘든 사람들 속 뒤집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에 와 보니 생각하던 것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인종차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에 나쁜 일 하나 터졌다 하면 탈북민

들한테 제일 먼저 피해가 와요.

일 나가다가 애 아빠[김복주 씨]는 남한 사람과 결혼했ad를 만났는데, 시집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요새는 많이 좋아져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물으니 이래요. "아가야, 말도 말아라. 사람들이 뒤에서 '어쩌다 북한 며느리를 얻었어' 하고 수군수군하더라."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때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3년 동안 매일 달 보고 별 보고 울었어요. 매일 베개를 적시면서 피눈물 흘렸어요. 상상도 안 했던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고 소식이 끊기고 보러갈 수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아프죠. 그걸 잊으려고 일에 미쳐서 산 거죠.

5년 전만 해도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요. 목숨이 질겨서 죽지는 않았지만, 내 주위 탈북민들은 자살 시도 몇 번을 해요. 나는 어쩌다가 자꾸 발견돼서 살았지만, 방치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요.

탈북민은 한국 정부도, 북한 정부도 돌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북에서 잘살면 여기서도 잘살고, 북에서도 힘들면 여기서도 밑바닥 인생이에요. 북에서 잘살던 사람들은 다 돈 갖고 왔기 때문에 잘살아요. 돈이 돈을 낳잖아요. 북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 정보료(보로금)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살아요.

북한에서 진짜 서민으로 살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서민이에요. 그냥, 밑바닥 쓰레기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 1위인데, 그중에서도 탈북자가 1위인 거 아세요? 탈북민들은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서 혼자 썩어가고, 솔직한 말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나, 그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가족 데리고 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가 매우 오래됐고 조직 규모도 미국 최대 수준이다.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교원연합(NEA)과 미국교원연맹(AFT)은 각각 1857년, 1916년에 설립됐고,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은 부문(33.5퍼센트, 2017년)에 속한다. 그러나 1959년에 위스콘신주에서 주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권을 최초로 제약한 이래, 교사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은 투쟁을 극도로 꺼려 왔다. 그보다는 이들은 노동조합을 '기업식'으로 운영하면서 교섭에 몰두해 왔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공화·민주 양당이 모두 계속해 온 교육 여건 악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거의 맞서지 못했고, 오히려 민주당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나 오바마 시절에도 구조조정의 강도는 켜지면 켜졌지 결코 약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금 파업 노동자들은 기층 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교육 부문 내 직종 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건설되며, 투쟁을 피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아래로부터 압박해 파업을 선포하게 하고(오클라호마주), 파업 기간에도 끊임없이 독자적 행동을 건설하며(애리조나주), 지도부의 파업 종료 선언에도 굴하지 않고 자체의 민주적 결의로 파업 대안을 지켜 끝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웨스트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의 이런 적극적·전투적 투쟁 건설은 미국에서 '점거하라' 운동의 서막을 알렸던 위스콘신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중적 정부 청사 점거 운

동에서 배운 것이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저항의 힘, 조직화 능력을 의제에 올렸던 사건으로(관련 글: 《마르크스21》 12호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이후 시카고 교사들의 두 차례 대규모 파업, 월마트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에 큰 영감을 줬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특히 공화당이 주도적인 지역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정치적 운동에서 표현된 저항의 정서에 고무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투쟁의 참가자들은 그 자신이 트럼프 정부 1년 동안 인종차별·성차별·경찰 폭력에 맞선 대규모 거리 항의 시위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샌더스 열풍에 동참했던 청년들의 연대와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노동운동 좌파들은 그런 저항의 열기를 교사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키는 데에 일정 구실을 하고 있다. 좌파들은 여러 주에서 교사 파업에 대한 연대를 조직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른 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끈기 있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계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의 노동자·좌파들은, 미국 노동운동이 교사 파업에 영감을 얻어 새로운 투쟁의 전기를 열기를 기대하면서, 미국 교사 파업이 보여 준 현장 노동자들의 직종과 부문을 뛰어넘는 적극적 투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준호

으로 구속이 돼요. 대한민국 국적 받아 놓고 북한 갔다고.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솔직히 탈북민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탈북민에 관한]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탈북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날은 '이제 고향 가는 날 정말 오려나' 했는데 뭔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해관계에 따라 작은 거[탈북민 문제]는 얼마든지 희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 정권에게 탈북민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항상 불안에 시달려요.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남한에는 모든 탈북민이 우파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정치가 나 밥 먹여 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유한국당에서 탈북 문제를 굉장히 부각하지만, 그 사람들[탈북민들]이 좋아서 그러는[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니까. 탈북민들은 취업도 힘들고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도 많아요. '전쟁, 전쟁' 하는 것보다 화해 무드가 낫잖아요. 물론 이런 기대가 실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북한 인권 운운하기 전에 탈북민들 인권부터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에게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당부의 한마디.

탈북민과 한국 사람들은 물과 기름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려 해요. 탈북민들도 마음을 열고 한국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고, 한국 사람들도 탈북민들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해요. 서로 동등하게 바라볼 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승주·강철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진 출처: 미국

트럼프가 중동에서 강패짓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는 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바로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배계급의 주류적 설명은 에드워드 루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기사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동에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가 고작 허영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을 테지만 문제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누가 졌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바로 미국과 영국). 그렇지만 승자는 누구였는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왔던 이라크 민중은 당연히 아니다.

정답은 이란이다. 미국·영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의 가장 위험한 적수인 [이라크 지배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 사담 후세인은 1980년대에 이란을 상대로 8년간의 유혈 낭자한 전쟁을 벌인 자다.

더군다나 후세인 정권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에서 소수인 수니파가 지배력을 휘둘렀음을 반영했다. 억압받던 다수 시아파는 후세인의 몰락 이후 정치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시아파에 기반을 둔 이란 정권은 십년 넘게 이라크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이란은 중동의 두 주요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의 부분적 분열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부의 주요 동맹인 레바논 시아파 운동 헤즈볼라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떠받치는 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시아파 민병대는 이라크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패퇴시키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이란 정권을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게다가 헤즈볼라는 최근 레바논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사태 전개는 중동의 다른 두 정권,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저주와 같다. 이스라엘은 적대적 이란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가 통치의 정당성을 교조적 수니파 이슬람에서 찾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조지 W 부시의 두 번째 임기 후반부 이래로, 이란을 회유하는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가 2015년 체결했던 핵협정은 이 정책의 연장선이었고 다른 5개 “세계 열강”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 협정에 반대했다. 이들이 반대하며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이란이 협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어겼다는 증거는 없다) 이란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집권하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요청에 귀 기울여 줄 미국 대통령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쟁일까? 미국 국방부는 2000년대 중반 이란을 공격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트럼프는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의사를 조금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에 맞서는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연합을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런 연합이 구체화한다면] 시온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차별적인 살라피스트가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잡는 기괴한 연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의 균형추가 이라크 쪽으로 기울도록 만들려고 1987~1988년에 미 해군과 공군의 힘을 동원해야 했다. 그리고 이란은 역대 동맹들을 구축하고 있어 중동에 진정된 “화염과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프는 경제 제재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유럽과 일본이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려 한다.

하지만 중동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지역이다. 최근 이라크 선거에서는 무끄타다 사드르가 이끄는 연합이 1위를 차지했다. 사드르는 [미국·영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한 대표적 인사였다. 그는 [수도] 바그다드의 사드르시티(그의 가문의 이름을 딴)를 중심으로 시아파 빈민 운동을 이끌었다. 이 운동은 절정기였던 2004년에,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던 전국적 반란에 합류할 가능성을 보이며 점령자들을 위협했다.

그런 단결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점령자들, 그리고 훗날 아이시스가 될 세력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저항 운동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했다.

사드르 세력의 무장조직인 ‘마흐디 군대’는 수니파를 상대로 한 암살단에 연루됐다. 비록 사드르가 이를 허락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사드르는 이제 돌아왔다. 그는 미국과 이란 둘 중 하나에 이라크가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고 세속주의자와 좌파가 참여하는 연합을 이끌고 있다.

바로 이것은 아랍 세계가 부패한 지배자들이나 외세의 노리개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05호번역 박이량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전주현

5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 위헌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그리스도교 우파를 비롯한 낙태 반대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앞세워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궤변

낙태 반대 진영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이며, 낙태죄 폐지는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명 서명을 조직한 천주교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인간 생명이 우선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주장은 극히 여성 차별적이다. 여성은 임신하면 그냥 인큐베이터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태어나 수정란에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인간으로 여기고, 따라서 다른 인간과 똑같은 권리(생명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을 거듭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태아는 모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다.

태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이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순탄한 것도 아니다. 그 많은 유산 중에 ‘자연스러운’



정미경



지니 폴 Paula Geraghty

것과 자연스럽게 않은 즉,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경우를 확실하게 구별할 방법도 없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자

연’ 유산을 경험한 여성 중 일부가 생명 보호 의무에 소홀한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약도 가능하다.

(위)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다

(왼쪽) 아일랜드 낙태권 운동처럼 기층에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출산과 낙태 모두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성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오롯이 여성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 반대 진영이 현행 제도 아래서 불법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생명 경시”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년에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2200만 건이 일어나고 매년 4만 7000명이 사망한다. 또한 낙태죄가 있어도 한국에서 연간 17만 건의 낙태가 일어난다. 이런 현실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제도적 폭력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노동계급 여성을 더욱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낙태는 계급적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만 생색내기식 조처 이상은 내놓지 않았다. 한부모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호소하지만, 정작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아주 짝퉁 인상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사회”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낙태 불법화로 노동계급 여성은 비싼 비용과 안전하지 않은 의료 시술도 감내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는 낙태 시술 후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야 한다. 반면 돈 많은 부자 여성들은 불법 낙태로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특권과 재력으로 안전한 시술을 받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양육 부담을 노동계급 가족과 여성에게 떠넘겨 왔다. 공공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낙태를 억압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무시하는 처사다.

낙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모호한 답변과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안 거부 입장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열의가 없다. 여성 가족부가 헌재에 낙태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 힘있는 법무부는 낙태죄 유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헌재 심판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낙태죄 조항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사유와 기간 제한을 전제로 낙태 규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이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층의 압력이 커지면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낙태죄를 폐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는 체제를 수호하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박근혜 파면 등의 판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체제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 위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없다면 지배자들은 순순히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윤 체제를 위해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몸과 삶은 체제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차별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나 문재인 정부에 기대지 말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태죄 폐지와 온전한 낙태권 보장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지지는 대중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은 매우 약하다. 진보 진영 내에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면서 낙태권을 얘기하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일각에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개인들의 피임 문제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지 않는다고 둘의 조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심지어 일부 좌파도 이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논리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위험하다. 이런 절충적 입장은 ‘좋은 낙태’와 ‘나쁜 낙태’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며 낙태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 준다.

물론 진보단체들은 대체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지만, 이런 절충주의 탓에 초기 낙태 허용이나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등 제한적 낙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안은 지금보다는 진보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유나 기간 제한을 두는 부분적 허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낙태 처벌 여지를 열어 두고 여성의 낙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도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려면 낙태 반대 진영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방어해야 한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임신 후기의 태아 사진과 동영상을 들이대며 낙태에 대한 죄의식을 부추기기도 한다.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영국의 통계를 보면, 후기 낙태는 전체 낙태의 1~2퍼센트 수준으로 매우 적다. 대개 낙태는 임신 12주 내에 이뤄진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사람들이 후기 낙태에 대해 혼란스런 감정을 지닌 것을 이용해 낙태 전만을 공격하려 한다.

여성에게 건강의 위험을 감수하고 후기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조건과 미래를 고려해 출산과 낙태를 결정한다. 낙태 불법화야말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와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는 강요된 선택으로 내몰 뿐이다.

따라서 여성이 원하면 사유와 기간에 상관 없이 모든 낙태가 보장돼야 한다. 낙태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낙태약과 낙태 수술은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낙태 뒤 충분히 쉬 수 있도록 유급휴가도 보장돼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 ★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 ★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 ★ 마트노조 촛불문화제
- ★ 숨진 이마트 청년 노동자를 기리며
- ★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 자본주의와 마약

마르크스 탄생 200년

마르크스, 일찍이 여성 차별 현실과
해방 잠재력에 주목하다

정진희

카를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오해가 꽤 있다. 더 나아가 그가 성차별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주목하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저작인 《신성가족》(1845)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말을 빌어, 사회의 진보를 여성해방의 진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48년에 쓴 《공산당 선언》에서도 여성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부르주아 가족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성해방을 사회주의 정치의 필수적 요소로 보았고, 차별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므로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는 여성해방을 그저 입발림으로 얘기하지 않고 당시 노동운동 내 성차별 사상과 맞서 싸웠다. 독일의 라살레 지지자들과 프랑스의 프루동 지지자들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경쟁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영역인 가정에 있어야 한다며 여성의 노동 참여를 반대했다. 마르크스는 이들의 사상을 경멸했고 여성의 노동권과 노조 가입을 옹호했다.

그뿐 아니라 마르크스는 여성의 동등한 정치·사회 활동 참여를 옹호했다. 제1인터내셔널에서 여성이 지도적 구실을 하도록 지원했고, 노동조합과 파리코뮌에서 제기된 여성의 구체적 요구를 지지했다.

물론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에 관해 포괄적인 분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평생 협력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 이하 《기원》)에서 여성 차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 책은 애초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쓰려던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무계급 사회를 광범하게 연구한 노트를 남겼다.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남긴 방대한 초고를 참고해서 《기원》을 썼다.

《기원》은 역사유물론을 적용해 여성 차별의 기원을 밝히며 여성해방의 전망을 밝힌 기념비적 저작이다. 당시는 가족을 자연적이고 영원한 제도로 보는 관념이 강력했는데, 엥겔스는 유물론적 분석을 통해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가족 형태가 인류 역사의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등장한 계급사회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급사회 철폐를 통해 여성 차별을 끝낼 수 있다는 혁명적 전망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의 통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변혁하고자 발전시킨 여러 분석은 오늘날 여성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늘날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활짝 보여 준다

삶을 이해하고 여성해방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소외와 역사유물론과 자본주의 동역학에 대한 분석, 노동계급 혁명 운동 이론은 모두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 차별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됐다.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밝힌 마르크스의 위대한 저작인 《자본론》은 자본주의 체제가 임금노동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가들이 얻는 잉여가치의 원천은 바로 임금노동 착취에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은 경쟁이고, 경쟁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적으로 확장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세계화와 제국주의)도 보여 준다.

여성의 삶을 자본주의 체제와 분리시켜 살펴보며 여성 차별을 (모종의) 남성의 지배욕으로 설명하는 가부장제 이론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과 여기서 비롯한 가족의 변화, 여성과 남성의 관계 변화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가 생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력) 재생산은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가 생산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는 바람에 가족이나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이

전통적으로 해 온 구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마르크스가 경제 환원론자라는 비난과 연결된다.

1970년대 서구의 좌파 페미니스트의 다수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한편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생산 영역에 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 차별을 설명할 때는 가부장제 이론의 개념을 수용해, 절충주의적인 이론 체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흔한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에서 노동력 재생산이 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노동자 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은 언제나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조건이다.”(《자본론》)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의 재생산이 이뤄지는 세부적 메커니즘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자본론》 1권을 보면, 마르크스가 재생산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가 임금에 대해 서술한 것을 보면, 임금은 개별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노동계급 가족 성원의 재생산과 관련돼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에도 자본주의 동역학이 침투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가사노동이 상품화되는 과정도 포착했

다. (자세한 내용은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여성과 《자본론》(217호)을 보시오.)

이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개되는 재생산을 생산과 별개로 파악한 게 아니라 생산의 동학과 결부시켜 파악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재생산이 자본의 필요에 종속된다고 봤다.

이런 분석은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하는 이중체계론과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이 연결돼 있다고 보면서도 둘을 병렬적으로 취급하는 이론(사회적 재생산 이론)과도 다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접근법 덕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가 대거 창출되는 한편, 자본 축적 논리가 노동계급 가족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오래 끌면 일자리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도 축소되면서 노동계급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흔히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 가족을 지탱할 물질적 토대가 사라졌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이런 예측은 산업혁명기에 여성과 아동이 하루 14시간씩, 휴일도 거의 없이 공장에서 착취당하면서 노동계급 가족이 거의 해체된 상황

에 바탕을 뒀다.)

실제로는, 자본가들의 필요와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19세기 후반 이후 노동계급의 가족은 재건됐다.

노동계급으로서 여성 다수의 힘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계급의 착취에 토대를 두고 굴러가므로 노동계급 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서로 벌이는 경쟁과 자본가 계급 대 노동계급의 투쟁 동학을 분석하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포착했다.

마르크스가 남성을 중심에 두고 노동계급을 얘기했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마르크스가 쓴 글을 보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로서 대거 일하고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본론》의 핵심 내용 하나가 지배계급이 남성 노동력을 값싸게 대체하려고 기계 도입과 함께 여성·아동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노동을 통한 해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해방이라는 게 아니라(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힘에 주목한 것이다.

여성이 임금노동자가 되면 직장과 집에서 이중부담을 안게 되지만, 자본주의가 임금노동 착취에 의존하므로 여성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와 함께 자신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회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 과정에서 중심적 구실을 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은 역사에서 거듭 입증됐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여성 노동자는 핵심적 구실을 했다. 가장 최근의 혁명인 2011년의 이집트 혁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여성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노동시장에 진출했고, 따라서 계급투쟁에서 중추적 구실을 수행한다. 중요한 노동자 투쟁에서 여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페미니즘의 흔한 가정과 달리, 여성은 동질적 이해관계를 지닌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남성 집단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이해관계로 분열돼 있다. 그리고 여성 내 계급적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성의 다수가 노동계급이므로 여성해방은 노동계급 해방과 분리될 수 없다. 계급 착취와 여성 차별 모두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만이 노동계급의 해방과 여성해방을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이다.

마르크스의 통찰과 정치적 실천은 오늘날 여성해방 투쟁에 필수적인 투쟁의 전략과 전망을 제공한다.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하며 분노한다.

문재인과 김상곤의 교원성과급 정책은 따지고 보면 이명박 때만도 못하다. 박근혜가 추진한 ‘교원업적평가’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뒀다. 이 제도는 근무평정(인사 관련)과 성과급을 연계해 이전보다 교사 간 경쟁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또,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들에게 차기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징계(최대 파면)하겠다고 공문 압박도 똑같이 따라했다.

2017년 대선 때 교사들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교육 의제 1순위로 꼽았다. 이 때문에 후보 시절 문재인은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라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후 보인 모습은 달랐다.

사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김대중 정권이 2001년에 처음 도입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정권은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고 교사 간 경쟁을 강화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착실히 닦고 ‘이명박근혜’가 더 큰 폭으로 확대한 성과급 차등률도 문재인은 유지하고 있다. 차등지급액은 128만 8400원(50퍼센트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 개혁 의제 1위는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적용 시)에서 257만 6810원(100퍼센트 적용 시) 사이다.

김상곤 장관, 실망의 아이콘 되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성과급 폐지다. 5월 1~10일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 2008명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가 1순위로 꼽혔다. 시급성은 5점 만점에서 4.92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연구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교원성과급제

도가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고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2011년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혁신학교들 대부분이 학교성과급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교육청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학교들이 최고 등급을 받는 모순을 똑똑히 본 바 있다.

이 모순은 개인성과급에서도 마찬가지다. 혁신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성과급은 반대로 교사들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이렇듯 한때 혁신교육의 상징이었던 김상곤 부총리의 후퇴는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을 안긴다.

그 점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동 공약에서 성과급제 폐지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만 성과급제 폐지를 공약했다).

광범한 불만

그러나 차등률만 짚고 조정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달랠 수 없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조사(3만 3132명 참가)에 따르면, 90.9퍼센트가 전교조가 추진하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참가하겠다고 응답했다.(참가자 중 전교조 조합원이 31.6퍼센트, 한국교총 회원이 20.2퍼센트, 가입한 교원단체가 없는 경우가 46.5퍼센트, 기타 단체 소속이 1.8퍼센트였다.)

성과급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매우 광범함을 보여 준다. 이미 지난해에도 성과급 균등분배에 전년보다 많은 최소 8만 7085명이 참가했다.(성과급제 폐지 서명에는 10만 4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조합원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가 징계와 금전적 불이익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교사들이 균등분배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전교조는 올해 균등분배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교사들이 균등분배와 명단 공개에 참가해 성과급 차등지급을 무력화하고, 정부에 성과급제 폐지를 압박해야 한다.(학교별·지역적으로 존재하는 전교조 조직력의 불균등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전국적 균등분배를 조직하는 것이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과급제는 정부가 교사를 경쟁시키고 통제를 하는, 그래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교사들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2012년 미국 시카고 교사들은 9일간 파업을 벌여 호봉제를 지켜내고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를 막아냈다. 또, 최근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은 20일가량 전면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관련 기사 8면).

전교조의 좌파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투지를 고무해 장차 대중 투쟁이 일어날 초석을 다져야 한다.

말로만 ‘노동 존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된 뒤 법외노조 철회 대신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다루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대법원이 판결할 일도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의 대

표 적폐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정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진지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

법무부는 최근에 ‘제3차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까지 실행하겠다는 국가인권정책이다. 노동권 관련 내용이 30여 쪽 된다. 그런데 핵심협약에 관한 정책 과제도,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기구가 권고한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 조항 폐지도 없다.

박근혜 적폐 답습

문재인 정부는 우익의 눈치를 보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이 단지 우파의 압력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도 (비록 자본가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은 아닐지라도) 자본가 정당

으로서 노동계급을 통제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자 그제서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금 정부는 전교조도 공무원노조처럼 길들이고 싶을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에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시도교육청 10곳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부산, 서울, 세종 교육청 등 10곳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 교육감과 보수 성향 교육감들(대구, 대전, 울산, 인천)은 노조 전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중 대구교육청은 벌써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해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전임 허가를 불허하겠다고니, 우파들의 기만 세울 뿐이다.

말로는 ‘노동 존중’ 운운하면서, 실천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조차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위선적이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철회하라!